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17대총선 후보자의 기초의식조사 결과보고서 발표 기자회견

▶일 시 : 2004년 4월 12일(월) 오후 2시

▶장 소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참여광장

- 인사말
- 참석자 소개
- 조사개요 설명
- 결과보고서 발표
- 질의응답



지역균형발전과 민주적 지방자치를 위한
지방분권운동대전본부

www.djbunkwon.or.kr

042)331-0096 F.252-6976

◆ 조사개요

1. 조사의 목적

본 조사는 유권자들의 알권리 충족과 유권자들의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임.
또한 지방살리기 3대 특별법의 제정과 더불어 신지방시대의 제도적 틀이 마련됨으로써
이의 구체적 실천과정에서 그 내용을 채우고 관련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의 방향을 추동해 나가기 위해
17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기초의식을 살펴보고
향후 17대 국회 원구성 이후에 이를 강력히 추진토록 촉구하기 위한 것임.

2. 조사의 개요

조사대상 : 제17대 국회의원선거 대전지역 후보자
조사방법 : 설문지 팩스전송 및 이메일전송
조사규모 : 후보자 32명 (전체응답수 23명, 전체응답율 71.9%)
조사기간 : 2004년 4월 2일 ~ 4월 9일

3. 주요조사내용

- ☐ 지방분권특별법의 과제와 관련법령의 제개정 내용을 중심으로 개혁적 질문들을 모아 조사함
 - . 지방분권의 추진기구 문제
 - . 행정분권 문제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 . 재정분권 문제 (지방재정 확충 및 건전성 강화)
 - . 자치권 강화 등 정치분권 문제
 - . 주민직접참여제도 강화 문제
 - . 자치행정의 책임성 강화 문제
- ☐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과제와 관련법령의 제개정 내용을 중심으로 개혁적 질문들을 모아 조사함
 -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확충 문제
 - . 공공기관, 기업 및 대학의 지방이전 문제
 - . 수도권 규제완화 및 수도권 신도시 개발 억제정책 문제
- ☐ 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의 과제와 관련법령의 제개정 내용은 이번 조사에서는 생략함

4. 응답률 (전체응답율 71.9%, 32명 후보 중 23명 응답)

□ 지역구별 응답현황 (응답자수/출마후보자수)

- 동 구 : 2/4명 (50.0%)
- 중 구 : 2/4명 (50.0%)
- 서구갑 : 4/6명 (66.7%)
- 서구을 : 6/7명 (85.7%)
- 유성구 : 3/5명 (60.0%)
- 대덕구 : 6/6명 (100.0%)

□ 소속정당별 응답현황(응답자수/출마후보자수)

- 한나라당 : 3/6명 (50.0%)
- 새천년민주당 : 5/6명 (83.3%)
- 열린우리당 : 4/6명 (66.7%)
- 자유민주연합 : 4/6명 (66.7%)
- 민주노동당 : 2/2명 (100.0%)
- 사회당 : 1/1명 (100.0%)
- 녹색사민당 : 1/1명 (100.0%)
- 무소속 : 3/4명 (75.0%)

※미응답 후보자 명단

- 한나라당 (3명) : 김철환(동구) 이영규(서구갑) 이인혁(유성구)
- 새천년민주당(1명) : 박천일(중구)
- 열린우리당 (2명) : 박병석(서구갑) 이상민(유성구)
- 자유민주연합(2명) : 임영호(동구) 박영철(중구)
- 무소속 (1명) : 김홍만(서구을)

5. 17대 총선후보자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기초의식조사 사업추진 경과보고

- 2004. 3. 4 대전본부 정기총회워크샵에서 17대총선 후보자의 지방분권에 관한 기초의식조사 사업추진 확정
- 2004. 3.18 대전본부 12차 운영위에서 기초의식조사 사업추진에 대한 의견 조정
- 2004. 3.30 기초의식조사 설문지 초안에 관하여 대전본부 임원단이 최종 회람한 후에 설문내용 확정
- 2004. 4. 2 17대총선 후보자의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기초의식조사 설문지 발송
- 2004. 4. 8 기초의식조사 설문 회신마감 (~오전 12시까지)
- 2004. 4. 9 기초의식조사 설문 회신마감일 1차 연기 공지 (~오후 3시까지)
- 2004. 4. 9 기초의식조사 설문 회신마감일 2차 연기 공지 및 최종마감시간 통지 (~저녁 9시)
- 2004. 4.11 대전본부 상임운영위원회에서 결과보고서 최종 검토
- 2004. 4.12 17대총선 후보자의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기초의식조사 결과보고서 발표 기자회견

◆ 조사결과 보고 및 분석

1. 기초의식조사 분석방법

- 1) 지방분권특별법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분야의 과제와 관련법령의 제개정 내용을 나누어 그 추진여부에 대한 후보자들의 입장을 측정하였다.
- 2) 지방분권특별법의 과제와 관련법령의 제개정 분야는 지방분권의 추진기구,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등 행정분권, 지방재정 확충 및 건전성 강화 등 재정분권, 자치권 강화 등 정치분권, 주민직접참여제도 강화, 자치행정의 책임성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여 그 추진여부를 질문하여 분석하였다.
- 3)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과제와 관련법령의 제개정 분야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확충, 공공기관 기업 및 대학의 지방이전, 수도권 규제완화 및 수도권신도시개발 억제정책 등을 내용으로 하여 그 추진여부를 질문하여 분석하였다.
- 4) 신행정수도특별조치법의 과제와 관련법령의 제개정 분야는 17대 총선에서 지역적인 쟁점사안으로 부각될 가능성을 배제하고 공정선거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번 조사에서는 생략하였다.
- 5) 각 질문별로 개별 후보자의 입장과 각 정당별 입장을 정리한 후 종합하여 분석하였다.

2. 사안별 후보자 입장 분석

- 1) 지방분권특별법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분야에 있어 모든 개혁과제들을 추진하겠다고 응답한 후보자는 응답자를 기준으로 30.4%(7/23명)를 점하고 있다. (권선택, 한기온, 한홍수, 정주신, 김원웅, 선재규, 신문휴 후보)
- 2) 지방분권특별법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분야에 있어 15개 문항 중 10개 이상의 개혁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답한 후보자는 95.7%(22/23명)로 민주당 정상훈 후보를 제외한 모든 응답자가 찬성의 입장을 보이고 있다.
- 3) 지방분권특별법 분야의 개혁과제 중 ①지방자치단체의 학예에 관한 책임성과 주민반응성을 제고하기 위해 일반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통합입법 추진을 묻는 질문과 ②정치에서 지방의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명부의 권역별 선정 후 정당별 전국특표율에 따른 의석배분제 도입 추진을 묻는 질문에 대해 각각 34.8%의 후보자가 반대 또는 유보의 입장을 보이고 있어, 전체 15개 문항 중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특이할 만한 사항이다.
- 4) 지방분권특별법 분야의 개혁과제 중 ①지방분권추진기구의 단일화를 위한 관련법령 개정, ②지방자치법 제

15조 '법령의 범위안에서'로 제한된 규정을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로 바꾸고 단서조항을 삭제하여 자치입법권을 확충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대해서는 응답자 전원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5)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분야의 개혁과제 중 선(先)지방균형발전 후(後)수도권규제완화 원칙에 입각한 수도권지역규제완화 및 수도권신도시 개발의 억제정책 추진에 응답자 전원이 찬성하고 있어 향후 3대 특별법 제정과정에서도 드러난 수도권지역의 반발과 함께 산업자원부의 수도권지역 규제완화 입법예고 등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기대된다.
- 6) 지방분권특별법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분야의 개혁과제 중 ①보충성의 원칙에 입각하여 국가의 지방기관위임사무의 폐지와 행정사무 일괄이양법의 제정 추진 ②특별행정기관중 공안 세무 현업기관을 제외한 기관의 사무 재원 인력의 포괄적인 지방이양 입법 추진 ③국세의 일정비율을 전입토록하는 관련법 개정과 균형발전특별회계 규모를 향후 10년간 11조 이상으로 증액하는 예산편성 추진에 대하여 민주당 정상훈 후보가 유일하게 유보의 입장을 보여 소속정당의 다른 후보들과 이견을 보이는 것이 특이할 만한 사항이다.
- 7) 지역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방법, 교통 등의 자치경찰제 도입입법 추진에 대해서는 한나라당 정용기 후보, 자민련 조영재 후보, 사회당 김윤기 후보 등 3명의 후보가 유보의 입장을 보이고 있다.
- 8) 지방의 자주재정력을 확보하기 위해 현행 국세 위주의 세제를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지방특별교부세의 도입을 통해 지방에 재배분하고,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현행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는 한편,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은 기준재정부족분의 90%수준으로 보전하는 세제개편 입법 추진에 대해서는 한나라당 정용기 후보, 자민련 정하용 후보, 민주노동당 김양호 후보가 유보의 입장을 보이고 있다. 참고로 지난해 지방분권국민운동과 지방자치단체 등 지방 5단체가 공동합의하여 제안한 지방분권특별법안에는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지방특별교부세 도입을 통한 세원 재배분 문제와 지방교부세 법정율은 기준재정부족의 보전율을 90% 수준으로 유지하는데 충분하도록 조정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 9) 자치단체장에 대한 독립성과 견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의회 (행정)직렬의 신설과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인사권 보장을 위한 관련법 개정을 묻는 질문에 대해 한나라당 정용기 후보, 민주당 정상훈 후보, 자민련 오희중 후보, 민주노동당 김양호 후보 등 4명이 유보의 입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덕구 자치단체장을 역임했던 자민련 오희중 후보가 유보의 입장을 보인 반면, 유성구 자치단체장을 지낸 이병령 후보는 찬성의 입장을 보인 것이 특이할 만한 사항이다.
- 10) 지방선거에 의해 공직에 취임한 자의 해직을 청구할 수 있는 주민소환제의 입법, 그리고 국가나 지자체의 방만한 재정운용으로 인한 예산낭비를 주민에 의한 직접 감시와 통제가 가능토록 하는 납세자소송제(주민소송제) 입법 추진 등 주민의 직접참여제도 강화에 해당되는 질문에 대해 자민련 정하용 후보는 주민소환제와 주민소송제 모두 유보의 입장을 나타냈다. 이밖에 주민소환제에 대해서는 한나라당 정용기 후보와 민주당 송인덕 후보가, 주민소송제에 대해서는 민주당 송유영 후보와 무소속 이병령 후보가 유보의 입장을 보이고 있다.
- 11) 국가균형발전시책의 추진과 관련하여 지방의 관심이 큰 공공기관과 기업 및 대학의 지방이전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에 대해서는 민주당 송인덕 후보·정상훈 후보·강희재 후보, 자민련 조영재 후보, 사회당 김윤기 후보가 유보의 입장을 보이고 있다.

- 12) 지방인재 등용을 확충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인재지역활당제의 입법 추진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송유영 후보와 송인덕 후보가 유보의 입장을 나타냈다.

3.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의 주요사안에 대하여 유보 또는 반대 입장을 표명한 후보자

- 1) 지방자치단체의 학예에 관한 책임성과 주민반응성을 제고하기 위해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의 통합 입법 추진
 - 반대 (1명) : 정상훈(민주당, 유성구)
 - 유보 (6명) : 강창희(한나라당, 중구) 송인덕(민주당, 서구을) 강희재(민주당, 대덕구)
 구논회(우리당, 서구을) 김양호(민노당, 서구갑) 김윤기(사회당, 서구을)
- 2) 지방선거에 의해 공직에 취임한 자의 해직을 청구할 수 있는 주민소환제의 입법 추진
 - 유보 (3명) : 정용기(한나라당, 대덕구) 송인덕(민주당, 서구을) 정하용(자민련, 서구을)
-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방만한 재정운용으로 인한 예산낭비를 주민에 의한 직접 감시와 통제가 가능토록 하는 납세자소송제(주민소송제) 입법 추진
 - 유보 (3명) : 송유영(민주당, 동구) 정하용(자민련, 서구을) 이병령(무소속, 유성구)
- 4) 균형발전특별회계의 규모가 현재 연간 5조원 규모에 그치고 있어 실효성이 없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국계의 일정비율을 전입토록 관련법을 개정하는 한편, 향후 10년간 총재원 규모를 11조원 이상의 규모로 증액하는 예산편성 추진
 - 유보 (1명) : 정상훈(민주당, 유성구)

4. 정당별 입장 분석

- 1) 지방분권특별법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과제와 관련법령 제개정의 문제에 대해 열린우리당은 대체로 수용 의사를 밝히고 있는 반면, 민주당이 유보 또는 반대의 입장을 가진 후보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이할 만한 사항으로는 소속정당이 동일하면서도 후보자 개개인 간의 입장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 2) 민주당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학예에 관한 책임성과 주민반응성을 제고하기 위한 일반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통합입법 추진, 공공기관과 기업 및 대학의 지방이전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 지방인재 등용

을 확충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인재지역할당제의 입법 추진에 대해서는 유보 또는 반대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1> 정당별 유보 및 반대 입장을 분류한 도표

(숫자 = 유보 / 반대 입장을 표명한 후보자수)

	Q1	Q2	Q3	Q4	Q5	Q6	Q7	Q8	Q9	Q10	Q11	Q12	Q13	Q14	Q15	계
한나라당	-	-	-	1 / 0	1 / 0	1 / 0	-	1 / 0	1 / 0	-	-	-	-	-	2 / 0	7 / 0
새천년민주당	-	1 / 0	1 / 0	-	2 / 1	-	-	1 / 0	1 / 0	1 / 0	3 / 0	1 / 0	-	2 / 0	0 / 2	13 / 3
열린우리당	-	-	-	-	1 / 0	-	-	-	-	-	-	-	-	-	1 / 0	2 / 0
자유민주연합	-	-	-	1 / 0	-	1 / 0	-	1 / 0	1 / 0	1 / 0	1 / 0	-	-	-	1 / 0	7 / 0
민주노동당	-	-	-	-	1 / 0	1 / 0	-	1 / 0	-	-	-	-	-	-	1 / 0	4 / 0
사회당	-	-	-	1 / 0	1 / 0	-	-	-	-	-	1 / 0	-	-	-	1 / 0	4 / 0
녹색사회당	-	-	-	-	-	-	-	-	-	-	-	-	-	-	-	-
무소속	-	-	-	-	-	-	-	-	-	1 / 0	-	-	-	-	-	1 / 0

◆ 후보자 개인별 응답 총괄표

1) 표시구분 : ○찬성, ▲유보, X반대, ∴기타

2) 정당구분 : 한(한나라당) 민(새천년민주당) 우(열린우리당) 자(자유민주연합) 노(민주노동당) 사(사회당) 녹사(녹색사민당) 무(무소속)

	Q1	Q2	Q3	Q4	Q5	Q6	Q7	Q8	Q9	Q10	Q11	Q12	Q13	Q14	Q15	찬성	유보	반대	기타
김칠환 한, 동구																			
송유영 민, 동구	○	○	○	○	○	○	○	○	○	▲	○	○	○	▲	○	13	2		
선병렬 우, 동구	○	○	○	○	○	○	○	○	○	○	○	○	○	○	▲	14	1		
임영호 자, 동구																			
강창희 한, 중구	○	○	○	○	▲	○	○	○	○	○	○	○	○	○	∴	○	13	1	1
박천일 민, 중구																			
권선택 우, 중구	○	○	○	○	○	○	○	○	○	○	○	○	○	○	○	15			
박영철 자, 중구																			
이영규 한, 서갑																			
이강철 민, 서갑	○	○	○	○	∴	○	○	○	○	○	○	○	○	○	○	14			1
박병석 우, 서갑																			
한기온 자, 서갑	○	○	○	○	○	○	○	○	○	○	○	○	○	○	○	15			
김양호 노, 서갑	○	○	○	○	▲	▲	○	▲	○	○	○	○	○	○	▲	11	4		
한홍수 무, 서갑	○	○	○	○	○	○	○	○	○	○	○	○	○	○	○	15			
이재선 한, 서을	○	○	○	○	○	○	○	○	○	○	○	○	○	○	▲	14	1		
송인덕 민, 서을	○	○	○	○	▲	○	○	○	▲	○	▲	○	○	▲	X	10	4	1	
구논회 우, 서을	○	○	○	○	▲	○	○	○	○	○	○	○	○	○	○	14	1		
정하용 자, 서을	○	○	○	○	○	▲	○	○	▲	▲	○	○	○	○	○	12	3		
김윤기 사, 서을	○	○	○	▲	▲	○	○	○	○	○	▲	○	○	○	▲	11	4		
김홍만 무, 서을																			
정주신 무, 서을	○	○	○	○	○	○	○	○	○	○	○	○	○	○	○	15			
이인혁 한, 유성																			
정상훈 민, 유성	○	▲	▲	○	X	○	○	▲	○	○	▲	▲	○	○	X	8	5	2	
이상민 우, 유성																			
조영재 자, 유성	○	○	○	▲	○	○	○	○	○	○	▲	○	○	○	▲	12	3		
이병령 무, 유성	○	○	○	○	○	○	○	○	○	▲	○	○	○	○	○	14	1		
정용기 한, 대덕	○	○	○	▲	○	▲	○	▲	▲	○	○	○	○	○	▲	10	5		
강희재 민, 대덕	○	○	○	○	▲	○	○	○	○	○	▲	○	○	○	○	13	2		
김원웅 우, 대덕	○	○	○	○	○	○	○	○	○	○	○	○	○	○	○	15			
오희중 자, 대덕	○	○	○	○	○	○	○	▲	○	○	○	○	○	○	○	14	1		
선재규 노, 대덕	○	○	○	○	○	○	○	○	○	○	○	○	○	○	○	15			
신문휴 녹사, 대덕	○	○	○	○	○	○	○	○	○	○	○	○	○	○	○	15			
찬성	23	22	22	20	15	20	23	19	20	20	18	22	23	20	15	302	38	3	2
유보		1	1	3	6	3		4	3	3	5	1		2	6				
반대					1										2				
기타					1									1					

17대 국회의원선거 출마자의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기초조사

안녕하십니까?

지방분권운동대전본부는 2002년 16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지방의 위기를 타개하고 국가경쟁의 패러다임을 분권과 분산형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대전지역의 학계·경제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 등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애쓰시던 각계각층의 힘을 모아 지난 2002년 11월 5일에 창립한 전국 네트워크 조직입니다.

특히 지방분권운동대전본부는 지나치게 비대해진 수도권과 영남실조에 걸린 지방의 대칭적 구조를 벗어나 골고루 잘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 지방분권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 등을 지방살리기 3대 특별법으로 일괄 제정토록 노력함으로써 지방화시대의 개척자이자 선도자의 역할을 감당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살리기 3대 특별법의 국회 통과는 어디까지나 지방살리기의 필요조건에 불과한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민관을 비롯하여 각계각층에서는 지방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국가 전체의 발전 잠재력을 키우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에 지방분권운동대전본부에서는 17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에 관한 기초조사를 실시, 그 조사결과를 지역 주민들에게 알림으로써 유권자들의 알권리 충족과 더불어 유권자들의 선택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탄핵정국으로 인해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최고조로 달한 상태에서 선거가 치러진다는 점에서 이 기초조사는 지역사회 발전과 정책선거로의 전환점을 마련한다는 마음으로 바쁘시더라도 성실하게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 4월 2일

지역균형발전과 민주적 지방자치를 위한 지방분권운동대전본부
상임공동대표 김주일 안성호 조연상

- ◆ 회 신 처 : 대전시 중구 선화동 184-22 보문평화회의집 1층 지방분권운동대전본부
전화/ 042-331-0096 전송/ 252-6976 이메일/ ngotj@korea.com
담당/ 김수현 간사
- ◆ 회신방법 : 우편발송·팩스전송·이메일 발송 가능
- ◆ 회신마감 : 2004년 4월 8일(목) 오전 12시까지

<회신용>

※ 귀하의 견해와 가장 가까운 항목에 √ 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항번호	① 찬 성	② 유 보	③ 반 대	④ 기 타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 인적사항(반드시 기재할 것)

성 명 _____

소속정당 _____

출마지역구 _____

지방분권운동대전본부 상임공동대표 귀중

<질문지>

※ 내실있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해 아래와 같은 지방살리기 의정활동 요청에 대해 귀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의 회신용 답지에 귀하의 견해와 가장 가까운 항목에 √ 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 지방분권특별법의 제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의 지방이양촉진법’에 의거한 ‘지방이양추진위원회’가 그대로 존치됨으로써 2중적 지방분권체제가 형성되어 혼란과 추진력의 약화가 예상되는바 이를 단일화하여 정책추진의 일관성과 추진력을 얻을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 추진
2. 보충성의 원칙에 입각하여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무는 모두 지방이 종합적이고 포괄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국가의 지방 기관위임사무의 폐지와 획기적인 사무이양 추진을 위한 행정사무 일괄이양법의 제정 추진
3. 특별행정기관 중 공안, 세무, 현업기관을 제외한 기관의 사무·재원·인력의 포괄적인 지방이양 입법 추진
4. 지역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방법, 교통 등의 자치경찰제 도입 입법 추진
5. 지방자치단체의 학예에 관한 책임성과 주민 반응성을 제고하기 위해 일반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통합 입법 추진
6. 지방의 자주재정력을 확보하기 위해 현행 국세 위주의 세제를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지방특별교부세의 도입을 통해 지방에 재배분하고,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현행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는 한편,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은 기준재정부족분의 90%수준으로 보전하는 세제개편 입법 추진
7. 지방자치법 제15조 ‘법령의 범위 안에서’로 제한된 규정을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로 바꾸고, 주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사항에 법률의 위임을 받도록 되어있는 단서조항을 삭제하여 자치입법권을 확충하는 지방자치법 개정 추진
8. 지방의회 소속공무원의 인사권을 지방의회의 견제대상인 자치단체장이 행사하는 모순을 해소하고 자치단체장에 대한 독립성과 견제력 강화를 위해 지방의회 (행정)직렬의 신설과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인사권 보장을 위한 관련법 개정 추진

9. 지방선거에 의해 공직에 취임한 자의 해직을 청구할 수 있는 주민소환제의 입법 추진
10.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방만한 재정운용으로 인한 예산낭비를 주민에 의한 직접 감시와 통제가 가능토록 하는 납세자소송제(주민소송제) 입법 추진
11. 공공기관, 기업 및 대학의 지방이전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제정 추진
12. 균형발전특별회계의 규모가 현재 연간 5조원 규모에 그치고 있어 실효성이 없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국세의 일정비율을 전입토록 관련법을 개정하는 한편, 향후 10년간 총재원의 규모를 11조원 이상의 규모로 증액하는 예산편성 추진
13. 선(先)지방균형발전 후(後)수도권규제완화 원칙에 입각한 수도권지역규제완화 및 수도권 신도시 개발의 억제정책 추진
14. 지방 인재의 등용을 확충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인재지역할당제의 입법 추진
15. 정치에서 지방의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명부의 권역별 선정후 정당별 전국득표율에 따른 의석 배분제 도입 추진

“성의있는 응답에 대단히 감사합니다!”